



[종합]  
K-웹툰  
세계서 러브콜  
거래액 1조 돌파  
04



코스피 2150.25 (0.00)	→	코스닥 772.81 (0.00)
금리 0.849 (+0.009)	↑	환율 1204.50 (+9.00) (10일)

# 이스타 구원투수 ‘제주항공’ 간만보다 발 빼는 원수되나

지난해 일본발(發) 경제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항공수요가 급감해 항공업계가 벼랑끝에 내몰렸다. 이같은 악재 속에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위기를 맞은 항공사들의 구원투수로 매번 이름을 올려 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경우 제주항공의 인수를 위한 노사갈등을 무릅쓰고 체질개선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제주항공 인수 합병(M&A)이 독으로 작용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이스타항공에 찾아온 위기를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 위기의 이스타항공

### (上) 인수합병 갈등 심화

이스타, 350명 인력감축 등  
M&A 위해 체질개선 진행  
무리한 조정에 유동성 위기  
M&A 불발 땐 벼랑 끝으로

◆제주항공, 항공사 M&A에 기  
웃기운… ‘경쟁사 훈들기’ 비판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

진 당시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수전 초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애경그룹이 경쟁업체의 노하우를 빼가거나 항공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애경그룹은 무리한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애경그룹은 인수전 참가

업체 중 유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의 기밀 자료인 ‘항공기 리스 계약조건’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항공기 리스 계약조건은 항공사의 기밀 중에서도 최고급 기밀에 속하며, 리스사와도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핵심 정보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도 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애경그룹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

계자는 “제주항공은 보잉 737 항공기만 보유하고 있어, 만약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구매할 경우 아시아나가 제공한 리스 계약조건은 리스사를 압박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애경이 아시아나 인수보다 운영 노하우와 장거리 운항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일자

JEJUair  
EASTAR+JET  
이스타항공

- 7월2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측에 10일 이내 선결 과제 이행 관련 공문 전달(800억~1천억원 규모, 무산시 파산 가능성 제기)
- 3일 이스타항공 노조, 제주항공 측의 셧다운 지시 녹취파일 공개 및 구조조정·임금체불 지휘 후 인수거부 규탄
- 6일 이스타항공 임시 주주총회 무산. 이스타항공 노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회망퇴직 규모도 사전에 산정해 제시했다고 주장
- 7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해소 책임 및 셧다운·구조조정 지시 등 전격 부인.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원수 촉구
- 15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1700억원 규모 미지급금 등 선행 조건 완수 데드라인

연합뉴스

## 社告



##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15일(수) ‘2020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고령화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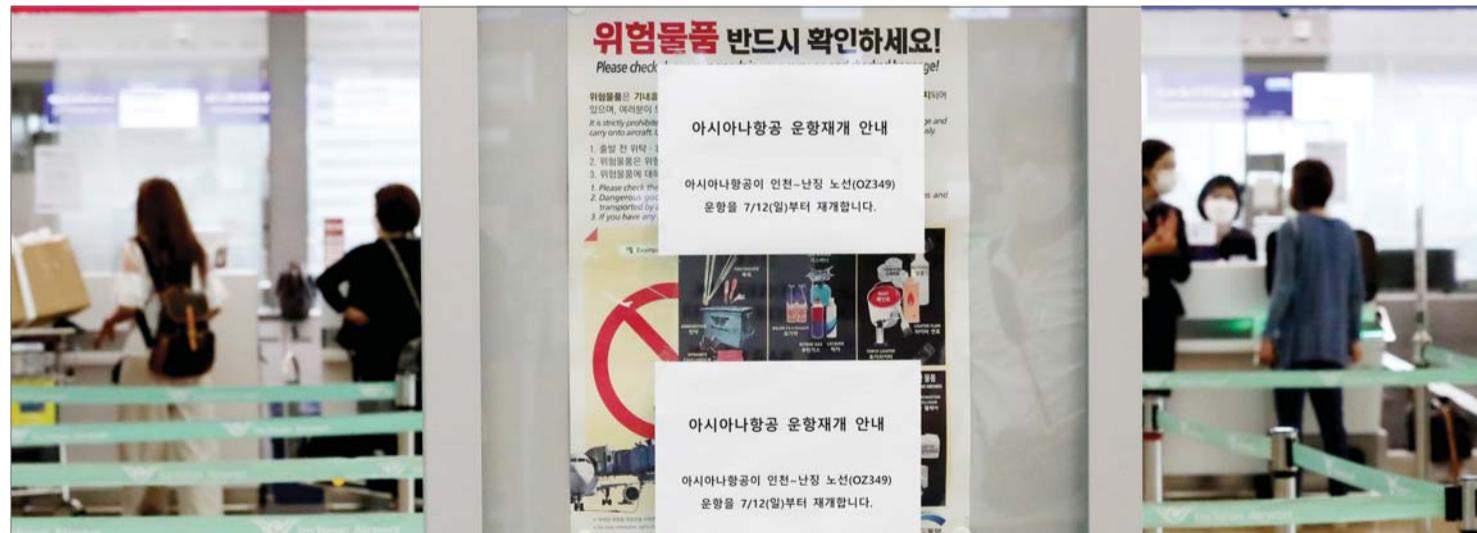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경제전망’ 기조강연과 ‘재테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부동산 투자전략 등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해 ‘ 가치투자 ’로 유명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부동산 투자전략을 제시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리츠운용 전문가인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행사명 : 2020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 제 :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 일 시 : 7월 15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metro<sup>®</sup>



### 韓中 항공노선 운항 첫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중국 난징(南京) 노선 운항을 재개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수속 카운터에서 운항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관련기사 6면)

##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국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0.3% 포인트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 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을 보면, 개정안은 7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10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은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다.

12·16 대책에 포함된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은 0.1~0.3% 포인트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 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한용수 기자 hys@

##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  
오늘부터 금융부문 조치 시행  
무주택자·처분 1주택자 대상

13일부터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단,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다. 또 규제지역 LTV와 종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

조치안에 따르면 우선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준 자금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지난달 19일 이전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

다면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가 적용되는 것.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당초 정부는 잔금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축소돼 반발

이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이 다수 제기됐고 참여자 수는 5만 여명을 넘었다. 이들이 지난 26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나흘 만에 6000명 넘게 몰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종전 자금 대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